

「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11월 28일

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산업국장 유 경 숙

나. 제안이유

-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
-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충전시설 필요함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건물은 2023. 1. 28.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- 현재 총 주차대수 19대로 설치 의무 공공건물\*에는 해당하지

않으나, 향후 인근에 추가 건립 예정인 탄소소재 연구인프라\*\*를 고려하고 예상되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

\*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  
(근거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5)

\*\*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센터,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센터

#### ※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
기 관 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(재)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* 경북도 출연기관	충전기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 100% 부담 (기관 자체예산)
민간운영사업자	충전기 설치 및 운영,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5항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\*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

\* 영구시설물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주차장, 수소충전소 등)

※ 근거: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

## 다. 주요내용

### ○ 사업개요

- 1) 사 업 명: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

2) 기 간: 2023. 12월

3) 위 치: 경북 구미시 산동읍 5공단7로 8

(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)

4) 주요시설: 완속 충전기 7kw 2기

#### ○ 운영방법

1) 운영주체: 민간운영사업자

2) 운영기간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회 연장 가능)

3) 운영범위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충전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
4) 운영방안: 개방적 운영(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)

#### ○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1) 설치장소: 산동읍 5공단7로 8,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

2) 설치수량: 충전기 2대(완속 2)

#### ○ 향후 추진계획

1) 2023. 12월: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

2) 2023. 12월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
3) 2023. 12월: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

4) 2023. 12월: 공사 착수 및 설치 완료

### 라. 참고사항

#### ○ 관계법령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2, 3
-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#### 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내 영구시설물(전기차 충전기) 축조를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

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센터는 설치의무 공공건물(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)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기차 보급 확산 및 향후 탄소 소재 연구인프라 건립에 대비하여 충전 시설을 설치·운영함으로써 충전 인프라 확보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적절한 위치 선정과 설치 후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   론      요      지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   사      결      과: 원안가결